

신경제정책 패키지

- 일본 정부는 12월 8일 생산성혁명과 인재양성혁명을 양륜으로 한 「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」를 결정함
- 인재양성 혁명에서는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하여 증가된 세수를 교육이나 보육의 무상화에 충당한다는 것이 핵심임. 예산규모는 기업의 거출금 3,000억 엔을 더하여 총액 2조 엔에 달함
- 생산성 혁명에서는 2018년도 이후 3%이상의 임금인상을 목표로, 법인세 감세와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일본의 생산성을 매년 2% 높이는 동시에, 설비투자액을 2020년까지 2016년도보다 10% 늘림
- 종합적으로 이번에 내놓은 신경제정책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지 않고, 성장과 재정 보다도 분배에 과도하게 편중되면 아베노믹스는 위험하다는 평가임

1. 개요

- 일본 정부는 12월 8일 생산성혁명과 인재양성혁명을 양륜으로 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결정함
 - 아베총리는 일본 정부여당정책간담회에서 세제, 예산, 규제개혁과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일본이 생산성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함
- 생산성혁명에서는 대담한 법인감세를 내놓음
 - 아베 총리는 3% 이상의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의 실효세율을 25%로, 또 임금인상에 더하여 IoT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면 20%로 각각 인하하기로 함
 - 벌어들인 이익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을 강화할 목적에서임
- 규제개혁에서도 전파의 할당에 가격경쟁의 요소를 담은 방침임
 - 일본총무성이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면허를 내주고 있으나 투명성을 높임.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통신료를 인하하거나 차세대고속통신「5G : 5세대 이동통신」서비스를 사용한 신기술을 창출

- 기업의 장래에 대한 비관론은 있음
 - 일본내각부에 의하면 상장기업에 의한 향후 5년간 실질경제성장을 예측은 연평균 1%로 과거 최저임
 -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 등 일본을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함
 - 또한 '17.6월에 발표된 미래투자전략(성장전략)에서 아베 총리가 생산성혁명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「샌드박스(기업의 신청에 대응하여 규제를 일시 동결하는 제도)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아 조기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임
- 인재양성혁명에서는 유아들에 대한 교육무상화를 놓고 아베노믹스의 축이 분배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음
- 금융완화, 재정출동, 성장전략을 3개의 화살로 하여 성장중시의 자세를 표방한 제2차 아베정권정권 발족당시와는 양상이 다름
-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디플레이션 탈출의 조짐도 보임
 - 다만 경기회복은 6년째 접어들어 6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. 규제개혁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경제의 실력은 높아지지 않음

2. 인재양성혁명

1) 유아교육의 무상화

- 3-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의 유치원, 인가보육소, 인정유아원의 비용을 무상화함. 어린이·육아지원신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치원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동 제도의 이용자부담액을 상한으로 하여 무상화 함
- 0-2세에 대해서도 당분간, 주민세 비과세세대를 대상으로 무상화를 추진함. 주민세 비과세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확대함
- 유치원, 인허가보육소, 인정유아원 이외의 무상화조치의 대상범위 등은 2018년도까지 결론을 냄
-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소비세율 인상과의 관계에서 증수액에 맞추어 2019년 4월부터 일부를 시작하여 2020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함

2) 대기아동의 해소

- 여성취업률 80%에 대응할 수 있는 32만 명분의 보육시설을 정비한 「육아안심플랜」 앞당겨 2020년도 말까지 시설을 정비하고 보육사의 처우개선을 추진함. 2019년 4월부터 나아가 1%(월 3,000엔 상당)의 임금인상을 실시함

3) 고등교육의 무상화

- 소득이 적은 가정의 어린이들, 진정 필요한 어린이들에 한하여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함. 수업료의 감면조치 확충과 함께 급부형장학금의 지급액을 대폭 늘림
- 수업료의 감면조치는 대학, 단기대학, 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 교부함. 학생이 대학 등에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함. 주민세 비과세세대의 어린이들은 국립대학의 경우는 수업료를 면제함
 -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평균수업료 수준을 감안한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까지 대응. 1학년생의 입학금도 면제함
- 지원대상자는 고교재학시의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의 학습의욕을 확인함. 진학 후에는 학습상황에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지급을 중단함
-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학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, 학문추구와 실천적 교육의 균형 잡힌 대학 등으로 하고 가이드라인을 책정함
- 고등교육의 무상화는 2020년 4월부터 실시함. 정해져있지 않은 상세한 부분은 검토를 계속하여 2018년도 여름까지 결론을 도출함

4)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

- 연간수입 590만 엔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는 소비세의 용처변경에 의한 현행제도·예산의 재검토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확보함
 - 2017년도 예산기준으로(1)주민세 비과세세대는 실질 무상화, (2)연간수입 350만 엔 미만인 세대는 최대 35만 엔 지급, (3)연간수입 590만 엔 미만인 세대는 최대 25만 엔의 지급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함. 그런 연후에 2020년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실질 무상화를 실현함

5) 간병 인력의 처우개선

- 간병서비스사업소에서 근속년수 10년 이상 간병복지사에 대하여 공비 1,000억 엔 정도를 투입, 월평균 8만 엔 상당의 처우개선을 2019년 10월부터 실시함

6) 정책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원

-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%로의 인상에 의한 증수분 중, 새로이 발생하는 1조 7,000엔 정도를 충당함
- 어린이·육아 거출금을 3,000억 엔 증액. 기업주도형 보육과 보육운영비에 충당함. 어린이·육아 지원법개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함

7) 재정건전화와의 관련성

- 2020년도의 기초적재정수지(PB : Primary Balance)흑자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움. 재정건전화의 기치는 내리지 않고 PB흑자화 자체는 견지함. 2018년 「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」에 달성시기,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시함

8) 2018년 여름까지 검토계속사항

- 재학습교육의 특단적인 확충, 중고년층의 재취직 지원 등 환경정비를 고용보험제도 등의 활용도 포함하여 2018년 여름까지 검토할 예정
- 대학교육이나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과 함께 호주의 대학학비 대출제도(HECS :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)등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중간소득층의 접근기회 균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함
- 저출산대책으로서 가일층 필요한 시책을 검토. 재원도 사회 전체로 부담한다는 이념 하에 재정의 효율화, 세금,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의 활용, 기업부담의 방식을 포함하여 검토

9) 규제제도 개혁 등

- 도도부현(都道府県)이 시구정촌(市区町村)을 뛰어넘는 보육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법적장치의 강화 등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함

3. 생산성혁명

- 매년 3%이상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일본의 생산성을 매년 2% 높임.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생산성 상승률 0.9%의 2배가 넘음
- 설비투자액을 2020년까지 2016년도보다 10% 늘릴 예정
- 2018년도 이후 3% 이상의 임금인상을 달성

1) 중소기업

- 모노즈쿠리보조금 등의 예산을 확충함
- 임금인상과 인적투자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을 경감함

2) 기업지원

-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을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때까지 경감함
 - 특히 인력투자에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경감 폭을 늘려줌. 임금인상을 실시하면서 혁신적인 기술로 생산성향상에 도전하는 기업은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때까지 경감함
-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과단성있는 경영판단을 촉진하는 세제조치를 강구함
- 2018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재검토하여 기업에게 다음의 조치를 촉구함
 -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, 인력투자
 - 독립된 지명·보수위원회의 활용, 독립사외이사에 의한 실효적인 감독·조언
 - 정책보유주식의 감축에 관한 방침의 명확화
 - 주식대가M&A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

3) 소사이어티 5.0 구축

□ 규제완화

-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하여 관련규제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환경 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의 샌드박스를 창설하기 위한 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함
- 특구 내에 지역한정형 샌드박스를 설치하는 국가전략특구법의 개정안을 차기정기국회에 제출함

□ 자동운행

- 2020년까지 무인자동에 의한 이동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함

□ 의료·간병

- 원격의료를 2018년도의 진료보수개정에서 보수의 대상으로 함
- 원격에서의 복약지도를 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안정성확보의 관점에서 검토함
- 자립지원 간병을 2018년도 간병보수개정에서 적절히 평가함
- 간병현장에서의 로봇이나 센서 활용에 관하여, 2018년도 개정에서 간병보수나 인원·설비기준을 재검토

□ 대학

- 한 법인에서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조직재편을 포함하여 이노베이션을 축으로 한 국공사립의 틀을 뛰어넘는 대학의 제휴나 통합
- 기능분담 방식에 대하여 2018년도까지 안을 작성하여 필요한 개혁을 추진

□ 전파


-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주파수대역의 반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의 구축이나 주파수이행을 촉진하는 종료촉진조치 등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충·창설
- 새로이 할당된 주파수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금액을 경원수속에서 신청하고, 이를 포함한 다수의 항목(인구커버율, 기술적 능력 등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당을 결정하기 위한 법안을 2018년까지 제출

□ 차세대 통신시스템

-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「5 G」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실현

4. 평가

- 현재 일본경제의 최대과제는 잠재성장력 강화와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상태 개선을 양립시키는 것인데, 신경제정책이 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임
 - 바꾸어 말하면 신경제정책에 성장과 재정양립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점임
- 먼저 인재양성 혁명과 관련하여, 유아들에 대한 교육 무상화를 놓고 아베노믹스의 축이 분배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임

- 인재양성혁명에서는 소비세율을 8%에서 10%로 인상하여 증가된 세수를 교육이나 보육의 무상화에 충당한다는 것이 핵심이므로, 예산규모는 기업의 거출금 3,000억 엔을 더하여 총액 2조 엔에 달함
- 그러나 저출산대책으로서 교육 무상화보다는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쉽도록 하여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하는 동시에 출산하고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, 대기 아동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임
- 또 일본정부는 2020년도까지 32만 명분의 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나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불안하다는 평가임
- 나아가 고소득세대를 포함하여 무상화를 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의 기초적재정수지를 흑자로 하는 목표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임
- 생산성혁명과 관련해서도 생산성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감세에 의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, 기업이 과거 최고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치고는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가 역부족이라는 평가임
- 기업통치를 강화할 수 있으면 풍부한 현·예금을 적극 투자하기가 쉬워지는데, 문제는 보조금 등의 예산조치임
- 예를 들면 일과성의 돈 뿌리기로 무리하게 중소기업의 정보기술투자를 지원하더라도 과잉설비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음
- 종합적으로, 성장과 재정보다도 분배에 과도하게 편중되면 아베노믹스는 위험하다는 평가임. 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7.12.9.)

<https://www.nikkei.com/>

『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』 일본 내각부, 2017년 12월8일

http://www5.cao.go.jp/keizai1/package/20171208_package.pdf